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일 시 : 2019. 3. 27.(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38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대(對)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제38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가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인천시의 대중국 교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충남도, 시·군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행사개요

- ▶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10:00~12:00
-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 주 제 :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 ▶ 강 사 :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 참석대상 : 충남도 및 산하 시, 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기타 관심 있는 모든 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	개회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송영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10:10~11:10	발제 ▶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11:10~11:40	토론 ▶ 발표자, 참석자	참석자 전원
11:40	폐회	

발표자 프로필

▶ 직 위 :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학 력 :

2002 - 2007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정부이론)
 1999 - 2002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대학원 석사(정치학이론)
 1992 - 1997 인하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사

▶ 경 력 :

2012 - 현재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2010 - 2012 국립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2008 - 2010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사후연구원

▶ 연구실적 및 주요 활동 :

저서		중국 산둥 거점도시의 형성과 발전	다인아트
		중국 중부 지역 거점도시의 형성과 발전	다인아트
	2016	중국 랴오닝 도시군의 형성과 발전	다인아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성장전략과 혁신	인천발전연구원
	2015	중국의 뉴노멀-발전방식재편과 정책동향	인천발전연구원
		전환기 중국의 심화개혁	인천발전연구원
	2014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	고려대아연출판부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인천발전연구원
	2013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	인천발전연구원
		황해에서의 초국경협력과 평화	인천발전연구원
	2012	민주주의와 중국	고려대아연출판부
		중국가족법령자료집 - 중화인민공화국편	모두의 지혜
	2011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한울아카데미
	2005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정책결정	문화발전소

주 요 학 문 영 역	2017.05	중국 징진지 도시군 지역발전과 산업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2017.04	중국 도시군연구 동향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12	중국 일대일로 거점도시별 산업특화에 따른 발전전략	中蘇研究
	2016.11	한중 인문유대와 지방도시간 인문교류	중국과 중국학
	2014.10	북중 초국경협력의 지속과 변화	한중사회과학연구
	2013.11	한중교류의 새로운 방식	한중사회과학연구
	2012.10	중국공산당 비공식 정치의 변화와 지속	한중사회과학연구
	2012.02	개혁기 중국 집체토지 권리제도의 변화	현대중국연구
	2011.07	중국도시가족의 양로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1.02	중국 도시사구의 자유평간 형성 가능성 탐색	현대중국연구
	2010.03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 비교연구	中蘇研究
	2009.11	중국 도시주택개혁 경로에 관한 연구	中國研究
	2009.08	한국 차이나타운의 지역명소화 전략 연구	중국과 중국학
	2009.02	중국 공공주택 모델 전환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008.12	중국 도시 토지제도 개혁과 지방정부 행위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주 요 학 문 영 역	2017.02-2019.02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16.11-2020.11	인천광역시 국제도시화위원회	위원
	2017.05-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위원
	2014.04-2016.03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회	위원
	2019.01-2021.12	한국유라시아학회	연구위원장
	2018.1-2018.1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사
	2015.3-2017.2	한중사회과학학회	이사
	2015.3-2020.2	중국지역학회	경제분과 이사
	2015.3-2020.2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2014.3-2015.12	『한중관계연구』	편집위원
주 요 학 문 영 역	2015.2-2021.1	『IDI도시연구』	편집위원
	2017.03-	INCHINA FORUM	위원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김 수 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상호보완적 한중관계의 전개
2.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 전환
3.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토대
4. 인천 對중국 도시외교: 현황 및 추진 방향
5. 종합 및 토론

Ⅰ. 개요

- ◆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의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 특히,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
- ◆ 인천의 對중국 교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상호보완적 한중관계의 전개

1. 1992년 수교와 한중교류 발전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 한중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는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역사적 유대·문화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함
- (경제적 측면) 한중 수교이후 ‘선도 수출형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후발 수출형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은 양국의 경제·산업구조 특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 － 수교 첫 해인 1992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64억 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약 33배 늘어난 2천 114억 달러에 달함
 -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수입국이 됐고 한국 역시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이 됨
- (사회적 측면) 양국 수교 이후 한류와 중국바람(漢風)으로 대변되는 한중 간 문화적 관심과 교류의 열기가 고조되고 한중 양국 간 상호방문자 수 역시 급증. 양국간 인적 교류는 수교 당시보다 120배 증가

2. 2000년대, 기민한 갈등 대처로 양국관계 지속 발전

- 2000년대 이후 활발한 한중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수교 초기 경제·사회 조건의 변화가 가시화됨
- (경제적 측면)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세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한중 양국의 밀접한 경제교류를 가져왔던 기본 구조 변화, 경쟁 대두
 - － 한중 호혜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는데 활용되었던 산업보완성 재편
 - － 한중 교역 패턴, 동일산업內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변경
 - － 중국은 과거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소비를 중시, 소비 위주의 내수경제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추진
- (사회적 측면) 밀접한 경제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던 역사, 문화적 요소로부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마찰이 점차 증대
 - － 질적인 내실화를 담보 못 한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험의 양적 증가가 점차 한계. 한중 사이의 역사·문화 충돌 격화되기 시작
 - － 다민족 통일국가론에 기초한 중국의 역사인식, 민간의 중화민족주의 대두 그리고 한국의 공격적 한류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반응
 - － 한의학, 단오제 등 양국 공유 문화에 대한 종주권 논란 등, 유교문화와 같은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 수교 초기 가졌던 호감은 실망감으로 전이 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함
-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와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했음
- 동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에서,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음
 - － (동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준에 비해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II.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 전환

1.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속에서의 사드 갈등

- 2017년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한중 갈등 격화, 주한미군 사드 도입으로 양국 관계 최악의 상황에 직면
 - － 사드 사태를 통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받았던 한중관계의 취약성 대두
 - － 한중간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이견을 관리할 토대 미흡 지적됨
- 사드 배치를 통해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 사드 갈등은 한중 양국의 틀을 벗어난 즉, 동북아에서 미중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임
 - －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가속화
 - － 북한 핵 능력 향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 역시 매우 제한적이 됨
- 한중관계는 향후 지속적 불안정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2. 사드 피해: 中신흥산업 진입 · 내수시장 공략 난항

- 한국은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중간재의 수출 호조로 대중국 교역에서 일부 성과를 거둠
 - － 2017년 11월 기준 대중국 수출이 128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수입은 892억달러로 12.9% 늘어남

- 무역수지는 390억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 하지만 사드 갈등이 가져온 문제와 향후 상황을 경시해서는 안됨
 - 한국과 중국은 산업간 가치사슬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 반도체, LCD, LED, 자동차강판, 고급 석유화학 소재 등 중국 수출의 95%를 이루는 중간재와 자본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껴감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자칫하면 중국 산업계의 피해로 전이될 수 있었기 때문
 - 하지만 사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 제조업 진흥을 위한 중국정부의 한국제품 규제와 조달라인 재구축 시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음
- 보다 큰 문제는 사드 갈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 및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로막혔다는 점임
 - 전기차용 배터리 등 아직 조달 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신형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참여 제한
- 또한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드 이슈가 중국 국민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펼쳐오던 한국 기업들 타격을 받음
- 그동안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울였던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됨
 -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산업과 면세점 등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국내 유통 기업들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음
 - ‘Made in Korea’ 제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류배우를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포스터가 중국 대도시 유명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차례로 내려졌고 간판의 한글 문구 역시 종이로 가려짐
 - 급감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 현지 판매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됨

Ⅲ.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토대

1. 선린우호 관계 견지 필요

-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선린우호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
 - －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이해상관자이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음
-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활용하고 기회를 살려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여전히 유효함
 - － 사드 갈등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경제관계를 동남아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기되기도 함
 - － 그러나 연간 6~7% 가량 성장하는 14억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이웃으로 곁에 두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해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다층적 한중네트워크 織造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의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 양국간 다층화된 연계망은 첨예한 안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①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음
 - － 또한 보다 빠른 관계 정상화를 위한 ② 복원력을 증대시킬 것임
 - －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 국가·도시에 대한 장소매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소비·문화·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 사드 갈등으로 인한 ③ 경제타격 완화·조기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음

3. 국제교류에 있어 지방정부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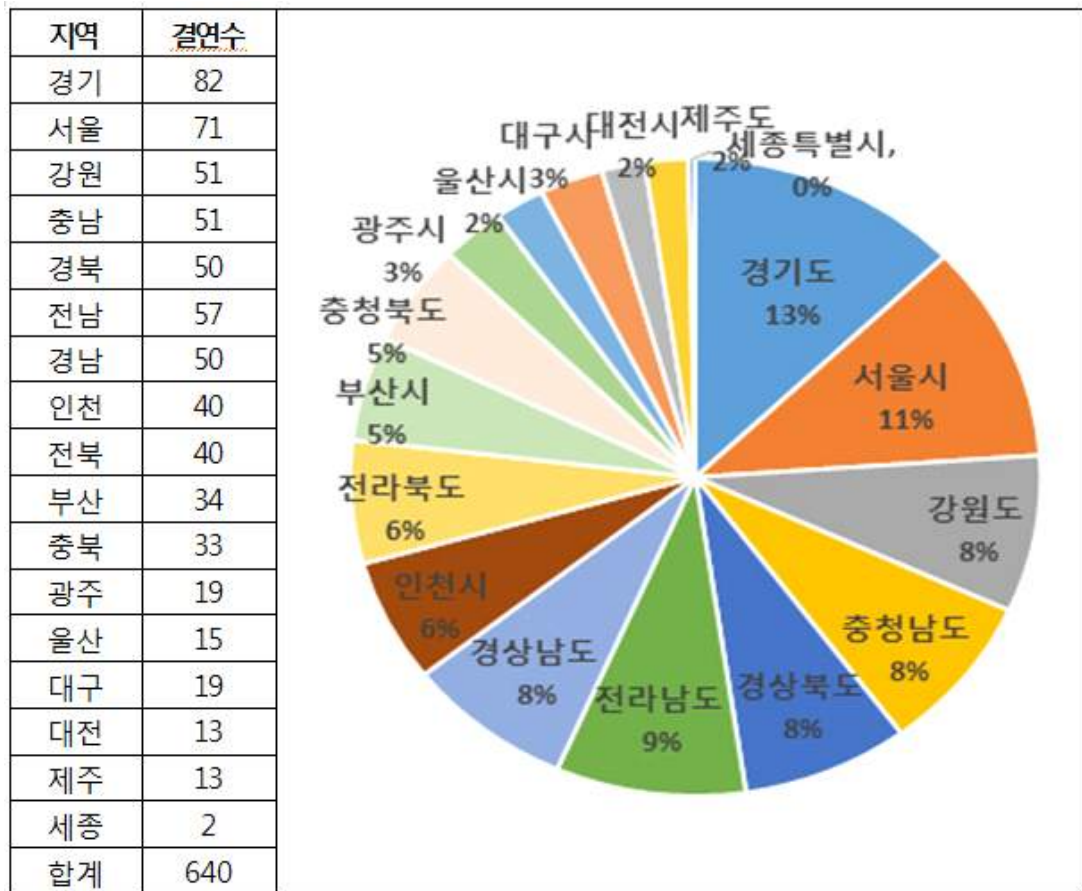
-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교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정부는 한중 양국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구비함
 -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①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
 - － 또한 지방정부는 기업,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②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 －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③사업기획력·업무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④재정기반을 지니고 있음

4. 한중 지방정부 네트워크 현황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지방정부간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짐
- 26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중 수교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가 상호교류에 매우 적극적임을 방증함
 - － 해외도시와의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지방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
 - － 지방정부간의 자매우호결연 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한중 지방정부 자매결연 결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그림 1>과 같이 2017년 기준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가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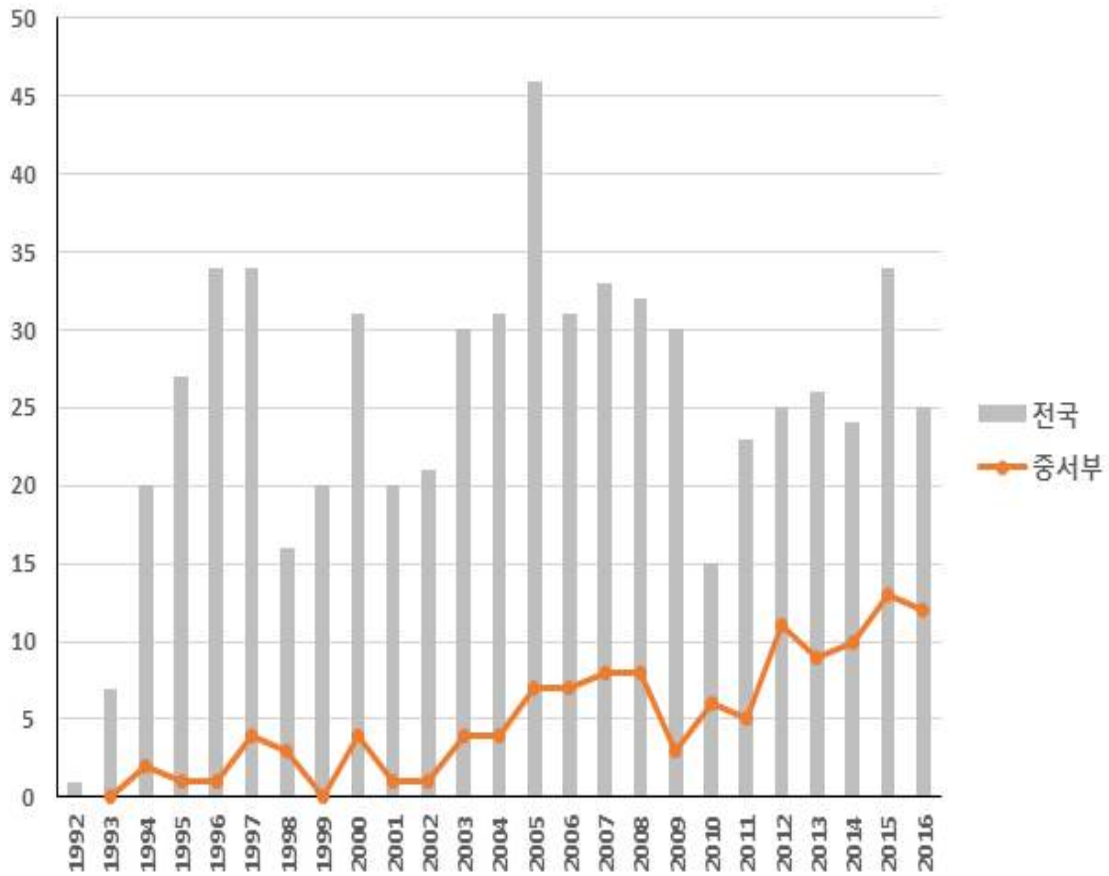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지방자치단체 - 중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 (2017)



출처 : 한국시도지사협의회 DB 정리

- 경기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맺은 결연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71건임
 - 인천 지역이 40건으로 광역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의 도시들과 자매우호 결연을 체결함
- 한국 지방정부와 결연을 체결한 중국의 지방정부는 주로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물류 등 경제교류 필요성에 의해, 환발해 권역과 화동권역에 결연이 집중되어 있음

<그림 3> 중국 전국 대 중서부 자매우호 결연 추이 (1992-2016년)



출처 : 한국시도지사협의회 DB 정리

○ 이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중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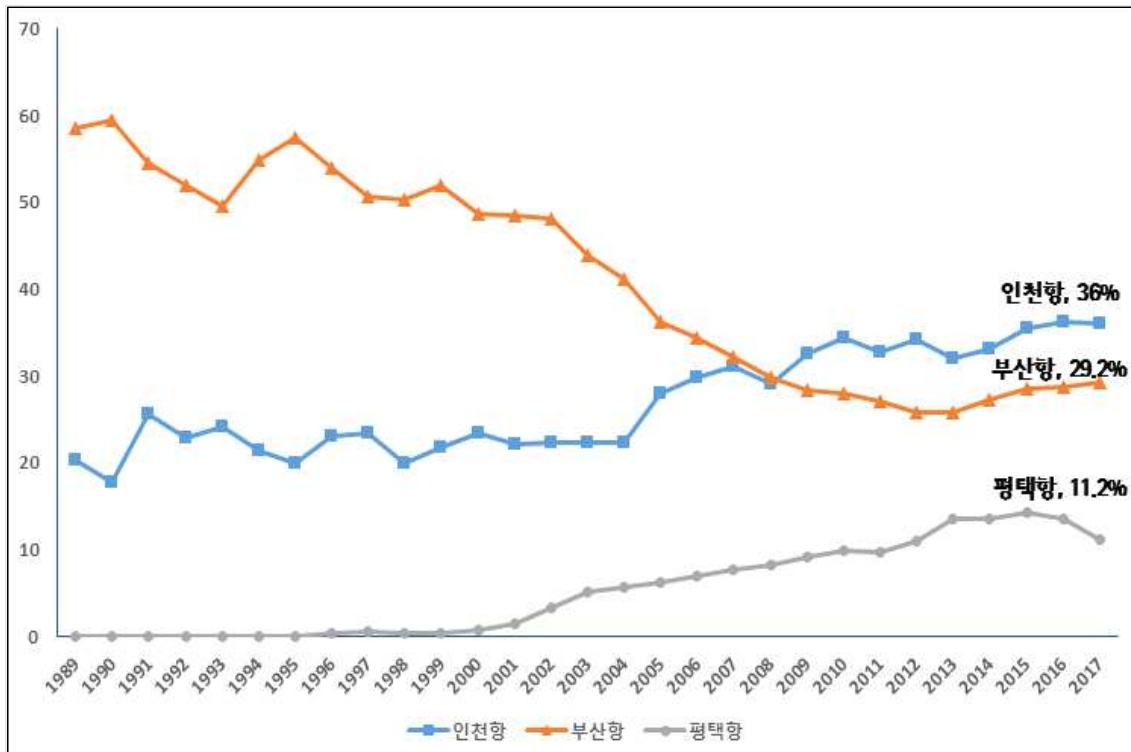
- － 국제교류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상층(중앙정부) 교류와 기층(국민) 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음
- － 한국과 중국의 교류채널을 다층화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형·체감형 사업을 발굴해내고,
- －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Ⅳ. 인천 對중국 지방외교: 현황 및 추진 방향

1. All ways Incheon : 환황해 중심도시 인천

-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를 선도해 온 인천의 역할 중요
-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연계하는 환황해네트워크의 중추에 자리 잡고 있음
- 인천은 이 같은 지정학적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의 발전과 안정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황해권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옴

<그림 4> 국내 항만 대중국 수출입 TOP3 비중 추이 (1989-2017년)



<그림 5> 인천항의 대중국 주요 교역항(2016년)



자료 : 인천항만공사 통계 자료 정리

- 인천 시정부는 사드 갈등 국면에서도 중국과의 교류협력 중요성을 강조해 옴
 - － 2017년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극심한 긴장과 갈등관계 속에서도 3월 중국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 한국 정관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가함
 - － 2017년 10월 중국 지방도시들의 민관산학 인사 330여명이 참석한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을 개최,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
- 향후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와 관련하여 인천의 선도 역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①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 － ②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 －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 － ④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2.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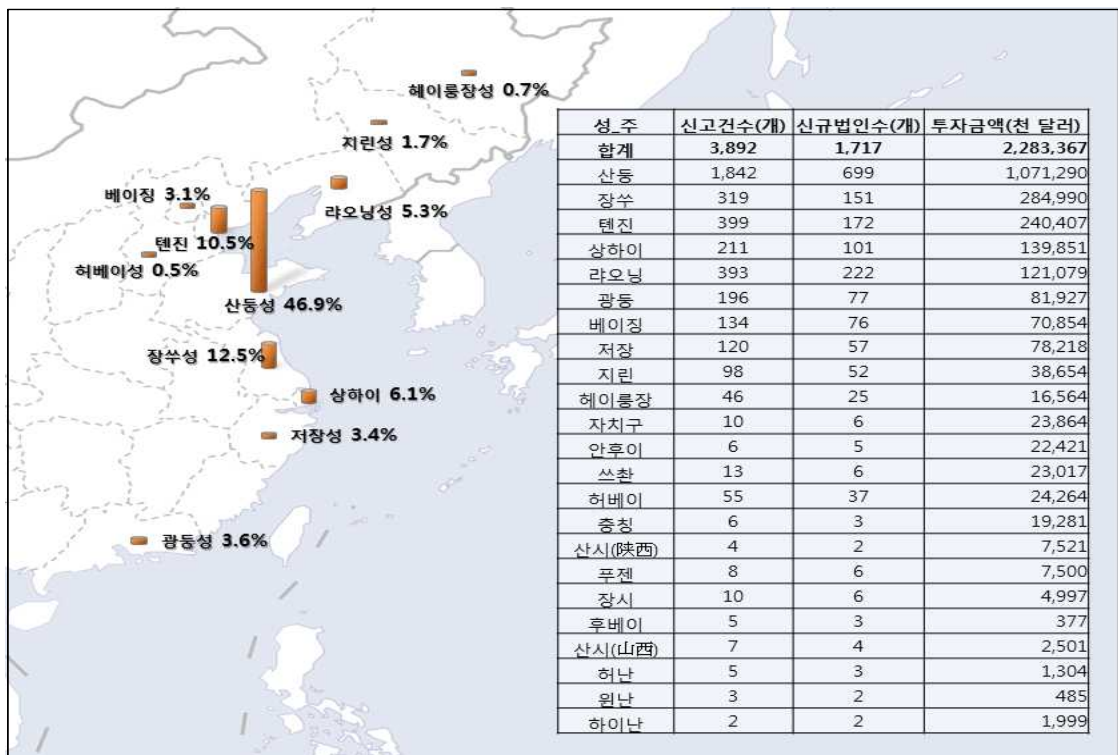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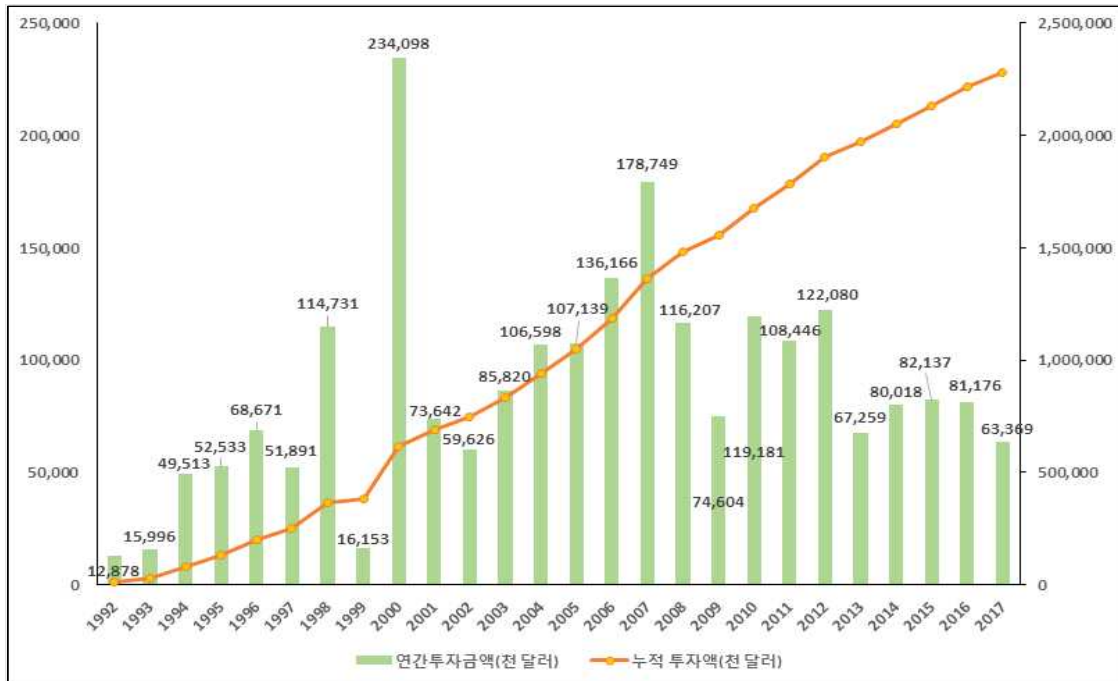
- 중국 동부연해 거점도시들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중심도시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의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 권역 별 거점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 외교 추진을 위해 한중 지방정부 파트너십 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축적된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간의 파트너십 체결이 중장기적 고려와 체계적 계획 속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국 측 제안의 수용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 － 한국 지방정부 민선 시장(도지사) 교체 등의 변화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이 단발성 협약 체결에만 머물고,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확대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음
- 인천은 자매우호 결연에 기초한 중국과의 기존 교류협력 관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 인천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지리적 근접성, 물류·항운 그리고 중소 제조업 진출에 주안점을 두고,
 - － 주로 근거리에 입지해 있는 환발해 권역의 톈진(1993), 다롄(1994), 단둥(1995), 칭다오(1995), 산둥성(2004), 옌타이(2007) 등의 도시들과 교류를 추진해 왔음
 - － 2007년 충칭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하여 인천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국 도시가 중서부 및 동북의 내륙지역과 그리고 남부 연해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

<그림 6> 인천광역시-중국 지방정부 자매우호도시 교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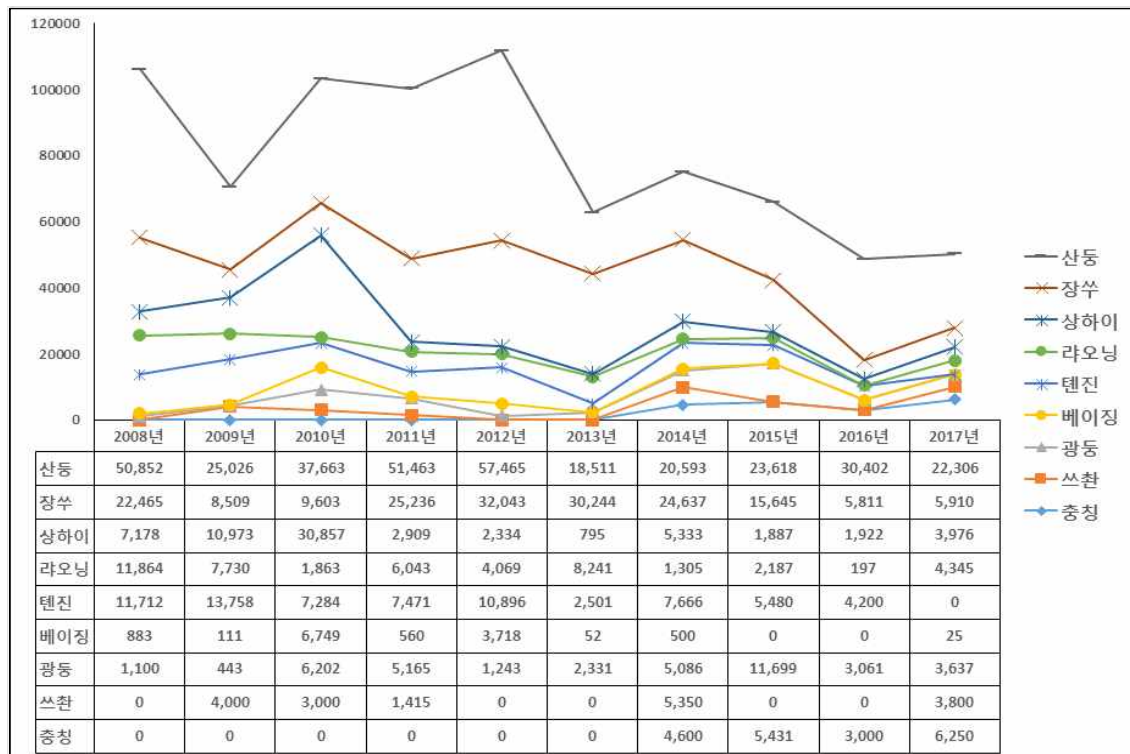
- 중국 권역별 지역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각 권역 현황에 부합하는 인천의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접근 모색
- 그동안 교류협력이 미미했던 상하이, 저장, 장쑤 등 중국 최대 발전 지역인 화둥 및 화남권역 도시들과의 관계를 개척 도모
 - － 화둥권역은 현재 중국 혁신경제 및 신대외경제 모델의 시범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
 - － 또한 해상실크로드 중심도시로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화남권역 아세안 접경지역 거점도시, 난닝 및 쿤밍 등과의 연계를 모색
 - － 이들 화남 거점도시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와의 경제협력 루트 다변화를 위한 중국내 연계 거점 마련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서부지역은 서남의 충칭, 청두 그리고 서북의 시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 인천과 자매결연관계인 충칭직할시를 서부지역 교류·협력 중심으로 삼아,
 - － 서북권역 단일 선도도시인 시안과의 협력관계를 개척하고 또 다른 서남부 거점도시인 청두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 이 같은 인천시의 대중국 지방외교를 통해 여전히 산둥, 장쑤 일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중국 경제교류 대상지를 확대
 - － 인천의 대중국 투자는 산둥성과 장쑤성에 집중되어 있음. 2016년 말 기준 인천의 중국 전체 누적투자액 21억 9,117만 달러 가운데 47.8%인 약 10억 4,665만달러가 산둥성에 투자되었음
 - － 화둥 및 화남권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영토 개척이 필요함

<그림 7> 인천의 중국 투자추이 및 지역별 투자 누적 현황 (1992~2017년)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정리

<그림 8> 인천의 중국 지역별 투자 추이(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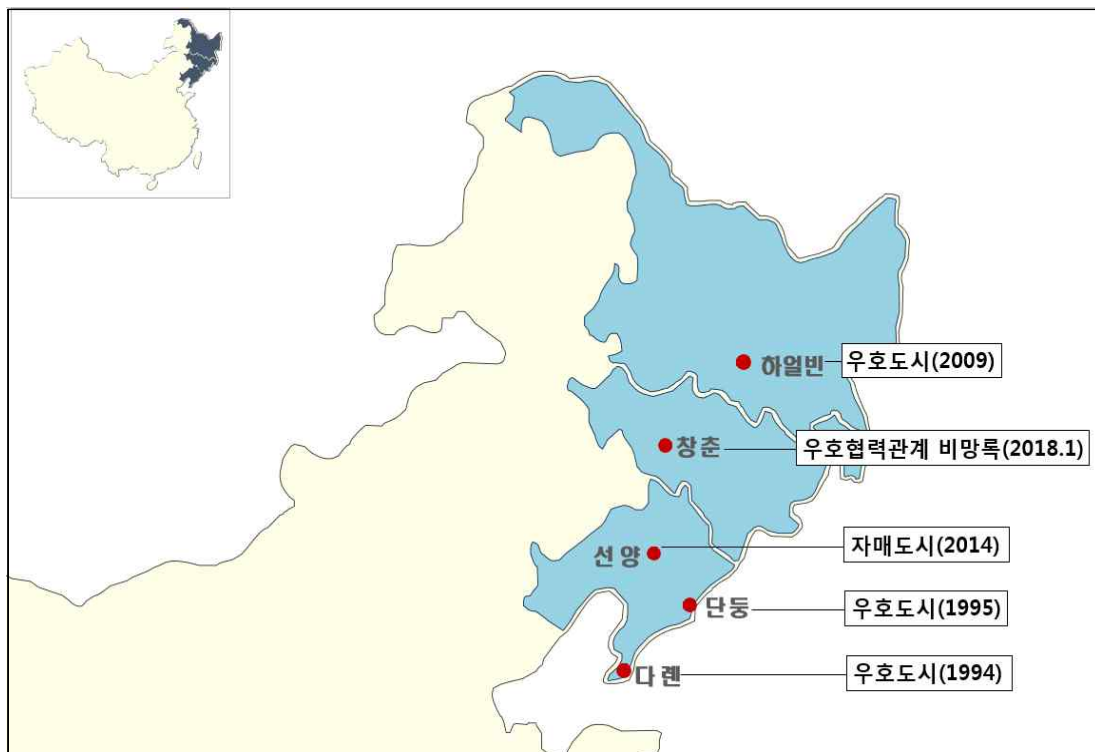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정리

3.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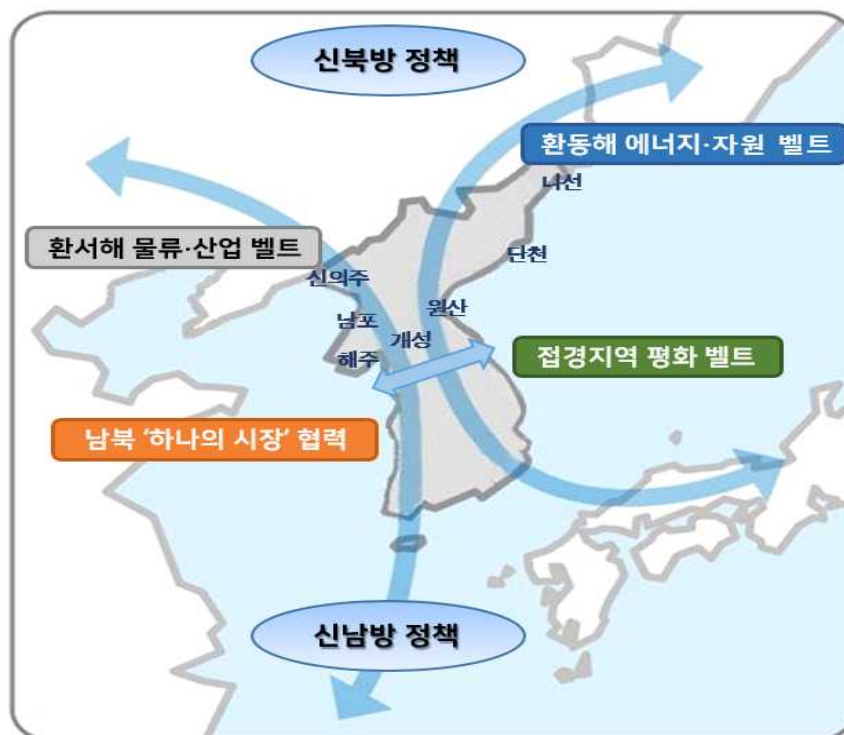
- 인천시는 중국 동북3성 중점도시들과의 촘촘한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차원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짐
 - － 한반도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은, 동북아 국제 교통·물류·에너지 라인의 핵심 루트이자 초국경 경제·산업 협력의 실험지대임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대통령 소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남·북한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을 천명

〈그림 7〉 인천-중국 동북3성 거점도시 자매우호 결연 현황



- 이 같은 인천-중국 동북3성간의 도시외교망은 북방경제협력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실질적 협력 성과를 내오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의 대중국 도시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발휘,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물류, 제조업, 바이오, 뷰티 등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산업 분야에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협력분야를 개척 노력
- 우리와 많은 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인문가치에 주목하여, 상생과 협력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류협력 강화
- 인천으로부터 출발하는 한반도와 대륙간 연결의 점점 구체화 노력

〈그림 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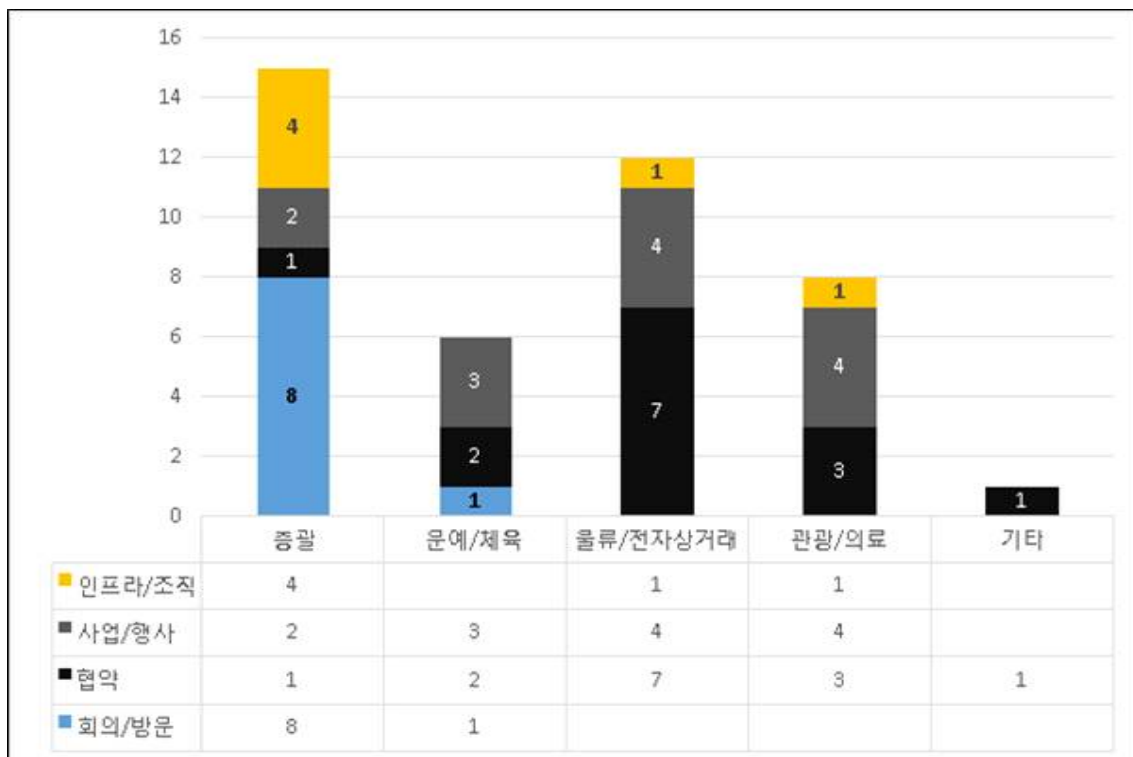


자료 : 〈2018년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등 참고하여 작성

4.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중국 산둥 웨이하이간의 <한중FTA지방경제 협력 시범지>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확대·발전
 - － 사드 배치로 인해 골이 깊어진 한중 갈등을 극복하기 지방교류의 모델을 교류 여건이 갖추어진 인천-웨이하이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구축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협정의 제도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인천-웨이하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노력

〈그림 9〉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인천-웨이하이 협력사업 (2015.7-2018.4)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 정리

5.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 중국 권역별 교류·비즈니스 접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의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을 지속적 강화
-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성과와 개선점 점검을 추진
 - － 인천시는 민관산학 각 분야의 중국 교류역량을 모아내기 위한 플랫폼인 <인차이나포럼> 구성하여 2016년부터 매년 1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 출범 4년을 맞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포럼이 일회성 행사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역할 강화 노력
 - － 조례에 기초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지역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운영

6. 대중국 공공외교 추진

- 대중국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적·인적·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사업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각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등 연성(軟性)자산을 활용하여 장소매력을 상대 지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산하는 공공외교를 대중국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인천시의 경우 지역 대학 재학 중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국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다문화 관련 부서 국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V. 종합 및 토론

1. 대중국 지방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필요

■ 한중 지방외교 권역별 허브조직 마련

- 1:1 형태의 한중 지방교류와 별개로, 한중 권역별 지방외교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함
- 한중교류에 있어 지방정부간 소모적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협력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권역별 공동 사업 구상을 통해 상호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그리고 상호보완적 경제산업 교류협력 증진이 가능함
 - － 예를 들어, △한중환발해권지방정부포럼 △해상실크로드 한중 지방정부포럼 △황해동아시아지방정부포럼 △환동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등을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제안, 다자간 협력을 틀을 조성할 수 있음
 - － 또한 일본의 ERINA(환동해연구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서해 권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초광역 지역종합연구소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 友協 매칭 국제교류 전문기구 활용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각 지역의 국제교류 기구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
 - －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과 명목상의 민간(외교)단체인 인민 대외우호교류협회(우협)가 합쳐져 있는 조직 구성에 상응하는 교류 채널 이 필요함

- 한국 지방정부의 순환보직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담당자의 국제교류의 전문성과 경험축적을 제한
- 이 같은 한국 지방정부의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국 우협에 상응하는 교류채널로서 한국 지방도시의 국제교류재단 등 전문 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중 지방 국제교류 여건 부합하는 교류아이템 · 채널 필요

-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많은 광역 지자체가 경제통상 또는 투자유치 부서 체계에 중국 교류 부서를 배치하여 두고 있으며, 관련 업무 내용 역시 경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에 대한 당과 중앙정부의 강조를 배경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적 · 인적 · 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 목적과 지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고안해야 함
- 국제교류에 있어 일방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아이템으로는 한중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 기층 <경제인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 지방정부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경제교류 내실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음

<한중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

- 청년창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중 양국 정부의 국정기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중청년창업인큐베이팅 기지>를 공동으로 설립
- 양국 도시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입주하여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에 범용(汎用)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함
- 정부 및 기업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

<텐진 국유기업경영진 인턴연수 (2014-2015년)>

인천 공공시설 및 산업체 탐방



- 컴팩스마트시티
- 뉴티공동판매소 '휴띠끄'
- U-CITY 통제센터
- 송도생활쓰레기집하시설
- 송도폐수처리장
- 인천국제항만 등

IFEZ 공공시설, 인천항 방문으로 도시운영 현황을 살펴봄

강좌



- 한국신흥산업발전정책 및 성공사례
- 인천해양물류산업
- 한국금융제도
- 한국발전모델
- 인천경제산업
- 한류·브랜드육성전략

중국어 원어강의를 통해 한국 및 인천에 대한 교육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 소래포구
- 월미도/월미전통공원
- 신평시장 등

인천 시민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의 명소를 방문하고, 시민들과의 교류기회 제공

의료시설 시찰 및 의료검진 체험



- 인하대학병원
- 길병원
- 국제성모병원

지역내 대형병원을 방문, 한국의 첨단 의료설비를 시찰하고, 의료검진 체험 제공

참고문헌

김수한(2018a), “한중관계 복원과 내실화를 위한 과제, CSF(중국전문가 포럼)

김수한(2018b), “시진핑 집권2기:한중관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큰 틀에서 한중관계 복원 모색 필요”, 『친디아플러스』. Vol.127.

김수한(2017), “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인천발전연구원 시정이슈제안.

김수한·전유정(2017a),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및 내실화 방안-국제사무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INChina Brief』.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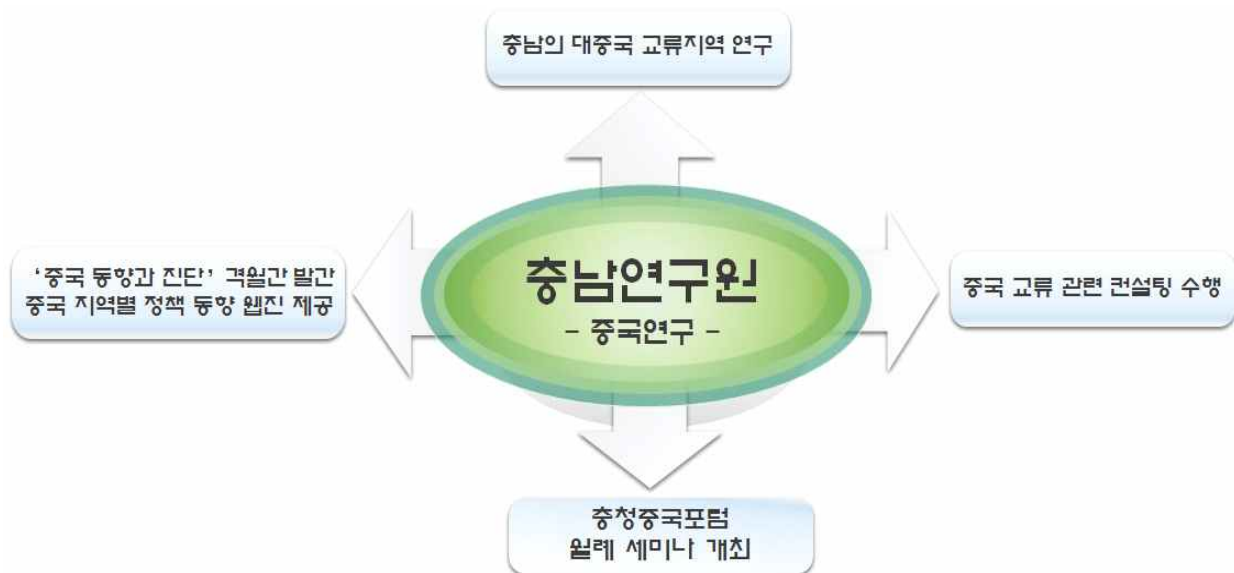
김수한·전유정(2017b), 『중국 권역 거점도시 지역발전 조사-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을 중심으로』.인천발전연구원.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 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중국연구’는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레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주요 이슈와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중국연구 기능〉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주대민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33회	2018.8.29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홍석민(아주경제신문 부장)
34회	2018.09.19.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송영현(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35회	2018.10.24	한국 청년들의 중국 창업전략 _ 중국 4차 산업혁명에 맞춰라	고영화(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36회	2018.11.28.	지방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	최철구(보령시 교류협력팀장) 김관기(논산시 국제교류팀장)
37회	2019.02.27.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국 창업의 불편한 진실	박지민(쿠키스파트너 대표, 중국중강그룹(SINOSTEEL) 인큐베이터 한국사업부 본부장)
38회	2019.03.27.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김수한 (인처연구원 연구위원)

MEMO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